

정보화시대 중국의 국가권력: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허정수

요 약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논의들 대부분은 중국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시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권력이 약화될 것이란 입장과 중국 당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중국의 미래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크게는 권력운영방식의 개념틀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권력’과 ‘사목권력’ 개념을 각각 활용하여 정보화시대 중국 정부의 권력을 ‘통제’와 ‘보살핌’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보권력은 정보화시대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반대로 ‘사목권력’은 중국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어떤 ‘목적’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다.

주제어: 중국, 정보화 시대, 정보화, 정보권력, 사목권력, 권력운영방식

* 이 연구는 201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SRF-201114002.01).

I. 머리말

오늘날 중국의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패권은 주변국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 이후 미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와 대비된 중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미국을 대신한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게끔 만들었다.

물론 중국의 미래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 대내외적으로 현재 중국은 몇몇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극심한 소득불균형 및 내수부진과 같은 ‘대내적 경제 불안’은 근래 중동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인들의 사회 불만을 자극하여 민주화 요구와 같은 ‘정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대외 문제’와의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여 중국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한국은행 2011).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최근 중국은 ‘대내적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 진작’을 당면 경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적 방편으로서 인터넷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부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근래 글로벌 위기가 금융자본의 위기 및 그와 관련한 세력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것이란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한국은행 2011), 왜냐하면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내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충’은 중국 정부에게는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경민 2007, 30).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부와 같은 기성권력주체보다 일반 시민들과 같은 미시권력주체들의 권력행사에 보다 유리한 토양을 제공하

여 정부가 추구하는 통제와 감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Goldfarb 2006). 물론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에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09년 9월에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產業振興規劃〉의 기본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규획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효율’을 추진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사회효율’을 주안점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中國國務院 2009). 이는 달리 말해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선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논의들 대부분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시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권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과 중국 당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따로 분리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비록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고경민 2007; 고경민 2008).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주장을 선불리 일반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례에 맞는 적절한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각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중국의 미래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그간 사실을 규명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두었던 까닭에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의 속성’(즉 기존 논의들은 중국의 정보화 관련 권력행사를 ‘통제’라는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이

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과 구체적인 ‘운영방식’(기존 논의들은 ‘통제 방식’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부재하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권력운영방식’이란 말 그대로 주체가 행사하는 권력의 특성과 그 운영 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정치학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권력자원은 그에 부합하는 사용방식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베버(Weber 1968)나 기든스(기든스 1991), 푸코(푸코 1991; Foucault 2000; 2007)가 전 근대 국가권력의 주요 권력자원으로 얘기한 ‘폭력’의 경우 ‘지식’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폭력’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원은 달(Dahl 1957)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객체의 사고와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행태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반면, ‘지식’등의 경우엔 바흐라쉬와 배래츠(Bachrach and Baratz 1970), 그리고 룩스(룩스 1992) 등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객체의 사고와 욕구를 ‘미리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순응을 확보하는 ‘간접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같은 무형의 권력자원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저마다 활용 형태와 목적이 다르다. 예컨대 ‘지식’에 바탕을 둔 ‘지식권력(knowledge power)’¹⁾이 “권력객체의 사고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지식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해, ‘정보권력(information power)’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식생산자들의 지식의 통과 범주는 규정하되²⁾, 지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일임하는, 지식생산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허정수 2010, 47).

그러나 각각의 권력자원이 저마다의 방식과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력자원이라 하더

1) ‘지식’은 ‘주관에 따라 개인화된 정보’로, ‘정보’는 ‘데이터에 대한 가공된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Alavi and Leidner 2001, 111).

2) 일반적으로 지식은 ‘정보’를 모체(母體)로 두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지식의 형태로 해석하고 생산되는 범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도 그 사용 목적과 방식이 또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정보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차별적인 보살핌을 목적’으로 권력객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정보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권력운영방식’의 틀을 통해서는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국가권력의 모든 행태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권력 개념들은 권력의 ‘목적’과 ‘속성’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찍이 푸코가 얘기한 ‘사목권력(pastoral power)’이란 개념에 주목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사목권력’은 ‘보살핌’과 ‘통제’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는 데(Foucault 2007, 128), 특히 ‘보살핌’의 축은 ‘지식권력’과 ‘정보권력’ 등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힘든 국가권력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권력운영방식 개념들’이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목권력’은 국가권력이 단순히 ‘군림하는 권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으로서의 속성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장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권력’ 등이 상대적으로 ‘보살핌’의 측면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목권력’은 국가권력의 ‘통제의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주체가 권력객체의 사고와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목권력’ 역시 ‘지식권력’과 ‘정보권력’을 통해 개념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크게는 권력운영방식의 개념틀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권력’과 ‘사목권력’ 개념의 한 축들(‘정보권력’의 ‘통제의 방식’의 측면과 ‘사목권력’의 ‘보살핌’의 측면)을 각각 활용하여 정보화시대 중국 정

부의 권력을 ‘통제’와 ‘보살핌’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보권력’은 정보화시대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반대로 ‘사목 권력’은 중국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어떤 ‘목적’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다.

II. 기존 논의 분석

정보화 시대 이후 권위주의 국가들의 권력행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보화로 인해 국가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보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Toffler 1980; Lash and Urry 1987; Strange 1996; Gompert 1999; Margolis And Resnick 2000; 네크로폰테 2003).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케드찌(Kedzie 1997)와 프리드먼(Friedman 2000) 같은 학자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혁명으로 인해 경제쇠퇴와 민주화라는 두 극단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기도 하며, 타웁만(Taubman 1998)과 노리스(Norris 2001)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되고, 정권의 성격 역시 민주주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이들은 반대로 ‘정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정치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초기 논의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지 못한 채 선불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인터넷 환경이 기성권력주체들에게도 유리한 권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Law and Callon

1992; Huges 1987; Ronfeldt 1992; Hart 1996; Lessig 1999; Hachigian 2002; Kalathil & Boas 2003; Alexander 2005; 고경민 2007; 고경민 2008). 즉 이들에 따르면 정보화는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상호 독립적인 형태로 각각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선 권위주의적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세련된 형태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중국에 비추어 봤을 때, 후자의 주장이 비교적 중국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미래의 중국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성공적으로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 기술은 대개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이다(Barber 1998, 575; Rosenau 2002, 275; 허정수 2010, 58). 다시 말해 정보화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그 기능과 속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은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검열과 감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경민 2007, 31; Chung 2008, 728).

이상 기존 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존 논의들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제’를 넘어 ‘보살핌’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통제방식’, 즉 국가가 ‘정보’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시민사회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또한 갖는다.

III.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1.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보살핌과 사목권력의 작동

(1) 사목권력과 보살핌

푸코는 일찍이 ‘군림하는 것(ruling)’과 ‘다스리는 것(governing)’을 구분하며,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권력의 작동을 ‘거버넌탈리티(governmentality)’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Foucault 2007, 115-116). 푸코에 따르면 ‘다스리기(govern)’라는 개념은 본래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주·생계·먹거리·위생 등의 호의적인 보살핌과 같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Foucault 2007, 122). 즉 본래 통치란 권력객체에 대한 단순한 ‘억압’과 ‘통제’만이 아닌, 개인들을 책임 있는 권위 아래에 두고 이들을 일정하고도 안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목자의 호의적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었던 셈이다(이문수 2010, 942).

푸코는 ‘거버넌탈리티’의 구체화된 형태로 ‘사목권력’을 든다. ‘사목권력’이란 말 그대로 양치기와 양떼와의 관계에 유추할 수 있는데, 양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양을 보살핀다. 하나는 항시적인 보살핌으로 양치기는 양에 대해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차별화된 보살핌을 제공한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앎’을 전제로 복지 및 치안의 제공과 같은 ‘보호권력’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둘째, 양치기는 양떼를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거나 우리로 다시 데려오는 일을 한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객체를 ‘특정한 사회’라는 목적(좋은 목초지) 아래 두고, 그 과정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목권력’은 일종의 ‘통제권력’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간단히 말해 ‘사목권력’은 개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 하에서 특정하게 행사되는 ‘보살핌의 권력’이자, 일정한 틀 내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통제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Foucault 2007, 128-130; 심재원 2008; 김상배 2010, 241; 이문수 2010, 945).

그런데 이러한 보살핌과 통제는 사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위해선 대상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Foucault 2007, 181)³⁾, 이러한 ‘앎’은 자연히 객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무리로부터 이탈이 발생할 경우(즉 통제가 실패할 경우) ‘앎’은 제한되기 마련이며, ‘제한된 앎’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객체는 통제되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목권력’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보살핌’과 ‘통제’는 모두 ‘감시’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푸코가 ‘보살핌을 위한 관찰’이라고 한 것은 곧 사실상 ‘감시’와 다르지 않으며, ‘통제’를 위해 양들이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감시’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목권력’의 ‘보살핌’과 ‘통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며, 그 속에는 이미 ‘감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목권력’에 있어 ‘감시’의 목적이 ‘통제’를 넘어선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양치기가 양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도 그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다. 즉 양치기의 ‘감시’는 양들에 대한 ‘보살핌’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비록 ‘사목권력’이 근대국가와 결부되기 시작한 17, 18세기 이후, ‘보살핌’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하지만(Foucault 2000; 이진경 2003, 161-162; 심재원 2008, 100-101), 과거는 물론이요 오늘날 국가의 권력행사 또한 ‘통제’와 ‘군림’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목권력’은 국가의 권력행사에 있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내재된 ‘보살핌’의 측면에 주목하게끔 만든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목권력’의 개념은 오늘날 중국 당국이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

3) 심지어 ‘사목권력’의 주체는 권력객체들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 그들의 사상과 양심과 같은 정신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Foucault 2007, 183; 이문수 2010, 946).

하여 중국의 시민사회와 시장에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이면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보살핌’ 혹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확충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목초지’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의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보살핌’을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 중국인들이 ‘목초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2) 보살핌: ‘온라인 시장 네트워크의 구축’과 ‘신용정보 수집’

전술하였듯이 ‘사목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보살핌을 명목으로 개개인에 대한 앎을 요구한다. 탈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살핌을 위한 명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국가가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체계화된 전산망을 통해 국민들이 일생을 통해 최소한 몇 번은 접하게 되는 국가기관들에 의해 파악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즉 오늘날 국가가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감시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의지’의 문제이지, 더 이상 ‘능력’의 문제는 아니게 된 셈이다. 비단 중국이 아니더라도, 선진국들 대다수가 시민들에 대한 돌봄을 명분으로 시민과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허정수 2010, 67-113).

근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심혈 역시 몇몇 선진국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인터넷망 확충과 전체 인터넷 사용자수에 따라 중국인들의 인터넷 노출 정도를 판단한다면, 최근 중국의 정보화 수준은 ‘사목권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인터넷 사용자 규모에서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11년 인터넷 사용자는 5억 명을 넘어섰다(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2). 블로그 등의 웹 2.0 이용자 수 역시 2008년 1월에 이미 8007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방화룡·권순동 2008, 218),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되는 온라인 메신저 계정은 2010년 9월 말 6억 3,600만개를 넘어섰고(Choi 2011, 118), 유선전화 가입 회선은 313,680,000 회선으로 23.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는 747,000,000명으로 보급률이 55.5%에 이른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40).

물론 중국 당국의 입장에선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몇몇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인터넷 기반 산업과 네트워크의 성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1980년대 초부터 정보화 부문이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표 1〉 중국 정부의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연도	구분	주요 내용
1999년	10차 5개년 계획 (十伍計劃)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국가 4대 현대화를 목표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 하고, 정부 운영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 ⁴⁾
2007년	11차 5개년 계획 (十一伍計劃)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 계획 제시 ⁵⁾
2009년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계획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보통신산업 각 부문별 경제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계획, 정책 방향 제시 ⁶⁾
2009년	문화산업진흥계획	국제금융위기와 문화영역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미디어 부문이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⁷⁾
2010년	12차 5개년 계획 (十二伍計劃)	계획기간 중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과학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제시 ⁸⁾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0: Kalathil and Boas 2003, 23 참고.

5)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7-128 참고.

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7-128 참고.

7) 中國國務院 2009: 김성웅 2009 참고.

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a 참고.

적인 하부구조라는 인식하에 정부 주도 하에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을 치밀하게 육성하였다(Kalathil and Boas 2003, 19). 정보화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정보화를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통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은 최근 10여 년 동안 그들이 발표한 정책과 계획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 계획들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정보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몇 가지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9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정보화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 정부가 애초부터 정보화를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보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보화’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는 사실은 일찍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정보화 성장과 네트워크 확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당국은 정보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차세대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금융관련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 없이는 항구적인 중국경제의 성장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당국은 정보화 부문의 성장이 내수 확대와 고용 증가라는 중국의 대내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운영의 방향을 경기과열 방지에서 성장촉진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방화룡·권순동 2008, 218), 특히 2010년에서 12.5 계획에서는 국가계획의 주요 10대 주력분야⁹⁾를 명시하면서 내수확대를 별도 독립분야로 뽑아 제시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인데, 왜냐하면 이는 5개년 계획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안유화 2011, 26-27). 이것은 중국이 성장을 주된 경제목표로 목초지를 만드는 것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목초지 위에서 양들이 편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중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 ‘권력행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이 ‘정보화’를 ‘대내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대내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판매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천명하였는데(안유화 2011, 27),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다른 아닌 온라인 판매 시장의 구축이다. 사실 그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온라인 쇼핑 등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Meyer et al., 2008). 그러나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규모 역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 관련 부문의 성장을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윤경우 2010;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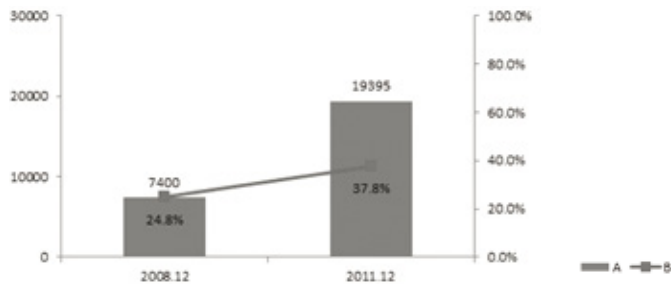
중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 라인 구축’과 ‘신용정보 구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온라인 판매 시장 구축’은 내수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구축’은 안정적인 내수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판매 라인 구축’과 ‘신용정보 구축’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필수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전자상거래

9) 10대 주력 분야에는 내수확대, 농업의 현대화, 산업구조의 경쟁력 제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 부강 전략 및 인재 강국전략,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 문화발전 촉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상생을 위한 개방전략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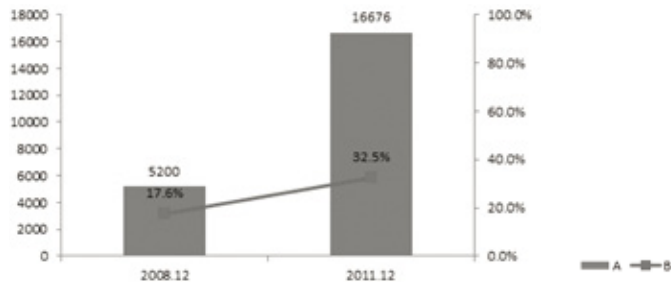
규범 발전 방안(商務部關於促進電子商務規範發展的意見)을 마련한다. 당국은 ‘방안’에서 크게 4가지 원칙하에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面向社會公眾加強宣傳引導(대중에 대한 전자거래방법 전파 및 지도), 둘째, 推動電子商務法律和政策體系建設(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체계건설), 셋째, 建立健全電子商務標準體系(전자상거래표준체계건설), 넷째, 加快電子商務信用體系建設(전자상거래신용체계건설)(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8)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국가 주도 하에 온라인 시장을 성장시키고, 중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을 일상화 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림 1〉 중국 온라인 쇼핑 비중/전체 쇼핑 대비(2008-2011) (단위: 만 명,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0, 38-40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2, 31-34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2〉 중국 온라인 결제 비중/전체 결제 대비(2008-2011) (단위: 만 명,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0, 38-40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2, 31-34 참고하여 재구성)

이상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법 제도적 뒷받침의 결과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에 없던 다양한 상품 거래가 이뤄지고, 2011년에 이르러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의 결정적 주체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2, 31).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문의 성장을 살펴보면 이는 위 <그림>과 같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쇼핑’은 최근 3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8년 12월 전체 쇼핑 규모 대비 비중이 24.8%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12월 현재 37.8%로 증대되었으며, ‘온라인 결제’가 전체 결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17.6%에서 2011년 32.5%로 2배 가량 증대되었다.

중국 당국이 내수 확대에 신경을 쓰게 된 계기는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두 가지 수준에서의 인식 변화를 갖게끔 만들었는데, 첫째 중국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불경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경기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통한 내수 확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0, 37; 서봉규 2010; 장윤미 2011; 안유화 2011), 둘째 변화무쌍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윤병수 2010).

사실 이러한 두 가지는 밀접한 ‘정책적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다. ‘내수 진작’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즉 늘어난 공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비대출’과 ‘신용판매 시스템 구축’이라는 ‘수요 진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 진작’을 위해 무작정 소비 신용판매 비율을 증대시킬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국 은행의 경쟁력과 건전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내수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내수성장을 일차적인 목표로 중국 당국은 ‘신용 있는 소비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

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제도 확립과 관련 정보수집에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량’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의 개인신용정보제도는 늦게 출발한 만큼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서봉규 2010, 101). 원래 중국의 금융제도는 국유상업은행 중심이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의 신용정보 생산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남수중 2008). 즉 1997년 전체 대출에서 소비자 대출은 0.5%에 불과하였고, 99.5%가 기업, 그것도 국유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부실 채권 해결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유상업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매금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했다.

수요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량 증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소매금융시장과 신용카드 발행량은 아래 <표 2>, <표 3>에서 볼 수 있듯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물론 신용카드가 많이 발급될 경우 부실 문제는 자연히 대두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중국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의 성장’을 위해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교적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중국의 대출 관련 정보는 한국의 공적신용정보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기록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CB와 비교해서도 정보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서봉규 2010, 106).¹⁰⁾ 나아가 신용카드 발급 역시 2006년 개인신용정보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발급시 의무적으로 중앙은

10) 이러한 정보수집의 근본목적은 내수 진작 및 금융위기 관리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속성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보수집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통제’의 힘 또한 더욱 증대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다.

〈표 2〉 중국 소매금융시장 규모(1998-2008)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대출 총액 (억 위안)	86,524	99,371	131,294	17,8198	22,5347	261,691	303,395
소매금융총액 규모 (억 위안)	456	4,265	10,684	19,881	24,059	32,751	36,866
소매금융시장규모/ 전체대출 중(%)	0.5	3.4	6.3	9.0	10.0	11.5	11

(서봉규 2010, 110. 〈표 7〉 참고하여 재구성)

〈표 3〉 중국 신용카드 발행량 추이(2003-200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카드 전체 발행량(억장)	6.4	7.6	9.6	11.8	14.9	18.0	20.8
신용카드 발행량(만장)	350	840	1397	3447	9026	14233	17525
신용카드발행규모/ 전체은행카드 발행 규모(%)	0.005	0.011	0.015	0.029	0.06	0.079	0.084

(서봉규 2010, 113 〈표 8〉 참고하여 재구성)

행의 개인신용정보를 첨부하도록 하고 연체기록, 대출기록, 타은행 신용카드 발급기록 등을 참고하여 1차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소득 증명서, 직장확인 전화 등의 2차 확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엄격한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서봉규 2010, 101, 113). 비록 신용카드 사업 확대 속에서 신용카드 연체가 증대되기는 하였지만, 신용카드 부실은 2009년 기준 전체 소매 금융대출 부실 비율 중 0.1%로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서봉규 2010, 114).

그렇다면 ‘정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권력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무엇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단언할 순 없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권력의 목적은 ‘통제’보다는 ‘보살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 권력은 비단 중국 정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그 자체 어떤 특별한 함의를 갖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그간 기존 연구들이 ‘정보화 시대 중국의 국가권력’을 분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통제’의 측면에 편중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즉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권력의 ‘보살핌’의 속성이 중국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그간 소홀히 대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례들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가 ‘정보화 네트워크’를 단순히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통제 권력의 앞으로의 성공적인 작동 여부 역시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보살핌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러한 보살핌은 권력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배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보살핌을 통해 권력의 객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권력 주체에게 갖는 저항의식을 미리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살핌은 곧 장기적인 수준에서 통제인 셈이다.

이처럼 ‘사목권력’의 ‘보살핌’의 축은, 기존 논의들이 쉽게 간과해온 정보화 시대 중국 국가권력의 ‘보살핌’의 이면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목권력’ 개념을 통해 중국 당국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단순히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준에서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나아가 그들의 권력의 목적이 ‘보살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인들의 사고와 양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분명 ‘보살핌’보다는 ‘통제’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사목권력’의 개념 역시 ‘통제’라는 축을 가진다. 그러나 ‘사목권력’은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사고와 양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목권력’의 개념을 넘어 ‘정보권력’의 개념을 통해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통제와 정보권력의 작동

(1) 정보권력과 통제의 방식

근대 이전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동원하는데 주로 사용했던 권력자원은 폭력이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동원할 방법이 무력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기든스 1991). 즉 피지배계층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지배층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복종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근대를 전후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 구성원 간 유기적 관계가 심화되면서부터, 나아가 지식이 피지배층에게도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은 피지배층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게 된다(Weber 1968; Poulantzas 1980; 기든스 1991; 푸코 1991; Mann 1993). 그리고 근대국가는 관료제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과 시민사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진행된 정보화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다. 정보화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증대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천안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하는 말을 끝이끝대로 듣지 않게 되었다. 즉 과거의 시민들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¹¹⁾하에서 국가의 의견과 해석을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날 시민들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회의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로 인해 국가의 시민사회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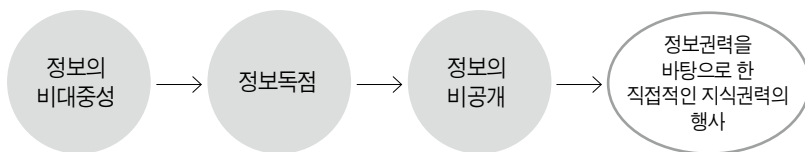
11) 스트레이니지에 따르면 ‘지식구조’란 지식이 발견되고, 저장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Strange 1988, 117-134).

고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도 존재한다(Galloway 2004; 김상배 2010, 허정수 2010). 특히 허정수(2010)는 지식과 정보가 구분되듯, 이들을 권력자원으로서도 상이한 권력자원으로 분류해야만 하며, 이 경우 지식부문에 있어 국가와 같은 기성권력주체의 권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부문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허정수 2010, 47).¹²⁾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객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보’가 ‘지식’에 대해 일종의 ‘구조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정보’를 모체(母體)로 한다는 점은 곧 ‘정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식’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흐라쉬와 배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 그리고 룩스(Lukes 1992) 등이 말하는 ‘권력의 구조적 힘’의 개념에 주목할 있는데, 이들은 A가 원하는 대로 B의 사고와 욕구를 조종함으로써 B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지식’과 ‘정보’와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생산자’는 ‘지식생산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일종의 구조적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권력’의 형태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허정수(2010)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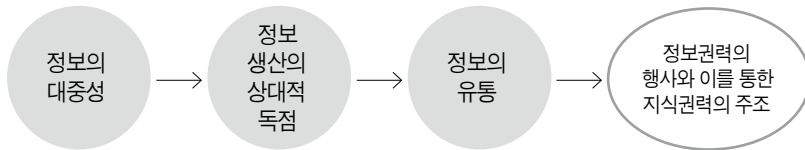
12) 물론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이는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보생산 영역에도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시민들이 생산 및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정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류석진 허정수 2010; PEJ 2010).

〈그림 4〉 전근대와 근대 시기의 국가의 정보 유통과 권력행사 패턴



(허정수 2010, 52, 〈그림 1〉)

〈그림 5〉 탈근대 이후 국가의 정보 유통과 권력행사 패턴



(허정수 2010, 53, 〈그림 2〉)

요컨대 근대를 전후한 시기 국가 혹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이 근접하기 어려운 형태로 정보를 생산 및 독점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대중의 지식생산을 직접적으로 규제했다고 한다면, 탈근대 시기의 국가들과 권력층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즉 자신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지식생산에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¹³⁾

이러한 구분에 중국 사례를 적용할 경우, 정보화 시대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은 오히려 ‘탈근대적인 정보권력’보다는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나 천안문 사태 등과 같이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생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

13)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식’에 의한 통제보다 ‘무력’에 의한 통제보다 세련된 권력이듯, ‘지식’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 ‘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재생산하는 권력이야말로 보다 세련된 형태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 정부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에 있어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허용하는 편이다. 물론 중국 정부의 ‘정보 차단’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범주 자체가 이미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자율성은 통제 하의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근대적인 정보권력’처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형성 자체를 무조건 막고 자신의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국 당국은 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결정의 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즉, 지식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다만 그들의 ‘의도’대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지식형성에 개입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탈근대적인 정보권력’ 또한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이러한 ‘정보권력’의 개념은 ‘사목권력’의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오늘날 중국 정부가 정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시장의 지식의 형성에 개입하고 있는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통제’를 목적으로 한 중국 정부의 권력행사방식이 크게 ‘근대적인 면’과 ‘탈근대적인 면’의 두 가지 특성을 고루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통제의 두 가지 방식: ‘정보의 차단’과 ‘의도된 지식의 생산’

1)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 정보의 차단

전술하였듯이 ‘보살핌’은 ‘통제’라는 축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즉 보살피기 위해선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며, 이러한 파악을 위해선 무엇보다 양을 파악하기 쉬운 ‘범주’에 계속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살핌’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정당성 혹은 명분을 부여한다. 양치기가 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양을 돌보듯이, ‘사목권력’은 ‘돌봄’의 명목 하에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과 ‘지식의 축적’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라는 양치기는 과거처럼 눈으로만 양을 돌보지 않는다. 국가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국가기관의 전산망 등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감시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한다. 정보화는 국가에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권력의 경제(economy of power)’¹⁴⁾를 제공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1999년 10차 5개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정보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정부 운영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애초부터 정보화를 바탕으로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른 아닌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체계이다. 특히 중국은 정보화 초기부터 정보 검열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기업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컨대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가 정보차단 및 반(反)해킹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나(Kalathil and Boas 2003, 37), 2004년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작업인 CN2에 미국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와 주니퍼 네트워크(Juniper Networks)가 참여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포티넷(Fortinet)은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기술을 중국의 정부, 기업, 교육 기관 등에 판매하였으며, 웹센스(WebSense)는 웹 필터링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태심 2011).

정책적 수준에선 2000년 10월 11일 제15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야별로 책임기관 하에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10여개 이상의 규제들이 집중적으로 공포되었는데, 주요 규제에는 상업적 인터넷

14) ‘권력의 경제’라는 개념은 푸코가 근대국가의 효율적 권력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Foucault 1991, 135-136).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 실시, 공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실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ICPs)에게 인터넷 서비스의 유형과 웹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ISPs와 ICPs는 60일 동안 이용자들의 접근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국가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경민 2007, 35).

특히 중국 전체 국제 광대역의 80%를 점유하는 상위 2대 네트워크(ChinaNET과 China169)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국제적인 인터넷 정보검열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즉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국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내부 네트워크 중 하나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검열 시스템의 근간에는 MII(the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놓여 있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가 MII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MII는 인터넷 규제와 정책, 법제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MII는 2005년 9월 25일 ‘인터넷 뉴스 정보 관리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11가지의 금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상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2)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 (3) 국가의 이익과 존엄에 해를 끼치는 행위 (4) 민족 차별과 고유성을 침해하는 행위 (5)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파괴하고, 미신과 나쁜 문화를 퍼뜨리는 행위 (6)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7) 음란물과 폭력, 도박, 테러, 범위 사주 등의 행위 (8) 다른 사람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방하는 행위 (9)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집회와 결사 등을 조장하는 행위 (10) 불법적인 시민 조직 아래에서 하는 행위 (11) 법과 국가의 행정 규제에 의해 금지된 다른 어떤 내용 등(Chung 2008, 734-736).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통해 중국 당국은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

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Loo 2004, 711), 사회 질서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웹페이지를 삭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3일, 중국 당국이 가장 유명한 BBBs(blogs, bulletin board systems)인 Yi Ta Hu Tu를 정치 루머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폐쇄시킨 사례(Chung 2008, 734-735)와 파룬궁 사건과 천안문 사건을 다룬 웹사이트, 그리고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대만과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이트들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 중국민주당(China Democracy Party: CDP)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된 사례 역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경민 2007, 39).

나아가 중국 당국은 방화벽,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모니터링 수단들을 설치하여, 대만, 티베트, 파룬궁,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토론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ONI 2005, 3; 고경민 2007, 35-36).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사이버 경찰 제도를 통해 정보 유통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발급하는 ‘운영 라이선스(Operational License)’를 수단으로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실시하여 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경민 2007, 36).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의 주인들은 고객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 업체들은 웹사이트의 온라인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Chung 2008, 737). 이러한 자기검열에는 외국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국제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은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통제’라는 부분을 수용하게끔 만들었다(고경민 2007, 41; Chung 2008, 737).

온라인 모임과 정보 확산의 대표적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SNS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와 기업들의 자기검열 역시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 행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SNS 시장의 특징은 세계적인 SNS 기업들의 약세와 ‘웨이보어(Weibo)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강세로 설명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2009년 하반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는 이유로 2009년 글로벌 대표 SNS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2010년 기준 SNS 가입자 수는 2억 3,500만 명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가히 놀라운 숫자라 할 것이다. 허나 중국의 SNS 사업자 또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중국 내에서의 SNS 붐이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이슈 논의 등의 SNS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논의 및 확대되는 것을 감시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중국의 SNS 운영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운영 라이선스’를 위해 24시간 자체 검열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웨이보’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신의 마이크로블로그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키워드의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때때로 중국 당국이 메시지 삭제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이렇게 볼 때 중국 SNS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이상 살펴본 중국 네트워크의 검열체제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은 극소수의 통제된 관문(portals)을 가진 반투막형태의 거대한 ‘국가 인트라넷’(national intranet)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며(Goldsmith and Wu 2006, 92, 149). 혹자는 중국을 ‘인터넷 규제와 검열의 세계 챔피언’ 국가라고 비꼬기도 한다(Pain 2005, 83).

중국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인터넷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시위의 확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위에서 살펴본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9)와 (10)은 이전 조치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 범주이다. 즉 중국 당국이 두 개의 새로운 규제 범주를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

국 정부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치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오프라인 시위로의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 가지고 있다(Chung 2008, 738).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을 통해 지식의 형성과 확산을 막는 ‘근대적인 정보권력’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탈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 ‘의도된 지식의 생산’

정보화 부문의 성장이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고, 나아가 국영기업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끔 만든다. 네트워크의 확충을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시민들에 대한 ‘읽’의 획득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나아가 정보공급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식’을 양산하는 공급원이라고도 할 ‘정보’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만이 아닌, ‘탈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국영기업과 통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당국은 단순히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이 시민사회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게끔 특정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일본이 난징 대학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룬 것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 사례나(Chung 2008) 2008년에 발생한 티베트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중화주의 표출 사례에서(이민자 2008) 볼 수 있듯이, 중국 당국은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인 대화와 같은 이슈를 묵인, 방관 또는 장려하기도 한다(윤경우 2010). 이는 체제 안정을 명목으로 인터넷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면서도, 중국 당국이 대내외 정책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서는 여론 조성의 통로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윤경우 2010).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유연한 태도로 인해 중국의 전자게시판이나 대화방은 검열과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의제설정 기능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치

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고경민 2007, 36-37). 중국 정부는 ‘합법적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며, 때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비록 중국 당국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주제에 대해선 토론하는 것을 금지 및 감시하고는 있기는 하나, 이전보다 사람들 간의 토론에 관대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인터넷 상의 공론장의 형성과 발전을 목인 또는 장려하는 것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의제들을 국민에게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고경민 2007, 41-42). 나아가 개방적인 인터넷 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체제 내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고경민 2007, 41-42; Chung 2008, 750; 신영미 2011, 137). 즉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만을 미리 수용함으로써 불만을 체제 내에서 미리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¹⁵⁾ 이런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 역시 인터넷 상의 토론을 장려하고, 정책의 피드백에 활용하기도 한다.¹⁶⁾ 이것은 중국 정부와 시민들 간에 전에 없던 형태의 상호작용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5) 중국 당국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3월 그래픽 디자이너 순즈강(孫志剛)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 여성은 외출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유량인 수용소에서 구금되어 구타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전원 처벌을 지시하도록 만들고, ‘도시유량자 구제 및 관리규정’이라는 새로운 법규 제정까지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이민자 2004 참고). 그 외 2003년 10월 16일 한 농부가 BMW의 사이드 미러를 실수로 부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의 친척인 차 주인이 차를 돌진하여 농부를 죽이고 구경꾼 12명을 부상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자, 정부가 새롭게 조사에 동의한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라 할 것이다(Chung 2008 참고).

16) 예를 들어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그리고 각 성의 당서기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누고 민의를 살피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하였으며(신영미 2011, 109 참고), 2010년 2월에는 후진타오가 인터넷 사이트 ‘人民問’이 개설한 중국 판 트위터 ‘人民微博’에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9월 8일에는 ‘直通中南海’에 인터넷 신문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중국인들의 민의를 수렴코자 하였다(윤경우 2010 참고).

인터넷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제한적인 형태에서나마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사회 복지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중국에는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루트’가 없다는 사실은(Chung 2008, 742),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루트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은 TV나 신문 등이 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공론의 공간으로써 대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Meyer et al., 2008; 신영미 2011, 109).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에서 실시한 최근 네티즌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여론은 사회문제 해결에 이익을 주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대중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90%를 상회해 네티즌들의 여론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실감할 수 있다(신영미 2011, 114).

그러나 개혁개방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의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이처럼 완화되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공산당의 위계적 통제 아래 중국의 시민사회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엇보다 이런 행위들 역시 어디까지나 중국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보다 확대된 공개 담론’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 당국이 사이버 상의 공론장의 형성과 발전을 묵인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론의 장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공개적으로 감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 이전에는 국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가의 감시를 피해 대개 은밀한 사적 모임을 통해 조직화되거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Goldfarb 2006).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에 대한 불만은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의사를 확인하고 쉽게 집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와 같은 기성권력주체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불만을 미리 확인하고 체제 불만 세력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지식의 형성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인 공론장을 통한 불만의 형성은 체제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체제 개선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중국은 어떤 면에서 중국인들의 의사, 즉 지식을 지하가 아닌 ‘가시적인 공간’ 하에 뚫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범주는 규제를 하되, 그 안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탈근대적인 정보권력’의 속성과 일치한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과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의 ‘탈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 역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탈근대적 정보권력’은 지식의 양산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지식의 생산 범주 자체를 규정함으로써 시장과 시민사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를 우리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일부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88%가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 이용자의 88%가 블로그나 인터넷 포럼 사이트에 글을 쓰고, 매주 SNS에 투자하는 시간 역시 5.2시간으로 세계 평균 3.1시간을 상회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경우 2010). 허나 그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할 경우 이들의 인터넷 활동이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며, 그들이 주로 다루는 이슈 역시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나 오락 혹은 대외관계 등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인터넷 토론방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신영미 2011, 114). 마찬가지로 정보나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한 블로거 역시 단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37.1%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이중희 2008, 288).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SNS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

방화룡·권순동(2008)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중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의 SNS는 네트워크 효과(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용이 급부 없이 증가하는 것)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즉 SNS가 중국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의미), SNS의 사회적 영향(자신의 준거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문화를 내부화하는 과정)은 한국과 달리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화룡·권순동 2008, 224-230). 다시 말해 중국에서 SNS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일이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것이 사회적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그것은 가능태로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인들의 지식의 형성과 그 속성을 규제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국 공무원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육검색(人肉檢索)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의 경우 지위를 막론하고 살아남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마치 중국인들은 인육검색을 통해 그간 정부의 탄압에 억눌려왔던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듯 여겨지며, 이것은 중국 당국이 정보콘텐츠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중국의 체제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Chung 2008, 740; 윤경우 2010).

그러나 중국이 이와 같은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탈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어떠한 사안과 그와 관련된 지식의 형성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경우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관련 정보의 생산을 엄격히 규제 및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근대적 탈근대적 정보권력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정보화 부문으로

하여금 권위주의적 체제 유지를 위한 훌륭한 통치의 수단에게끔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 정부가 단순히 통제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보살핌’ 역시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미 말했듯이 보살핌은 단순한 ‘호의적인 베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체계적인 보살핌을 통해 권력의 객체가 원하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그들이 권력주체에게 가질 수 있는 불만과 저항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보살핌은 ‘통제에 대한 저항의 수준’을 구조적으로 미리 구조화하는 셈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화 시대 중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정보권력’과 ‘사목권력’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오늘날 중국 정부가 ‘정보’와 ‘지식’이라는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력은 ‘보살핌’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 ‘사목권력’과 ‘정보권력’ 두 개념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고루 갖춘 두 권력의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한편으론 보살피며, 다른 한편으론 통제한다. 나아가 ‘정보차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사회의 지식형성에 개입하기도 하며, 때론 ‘선택적인 정보공급과 지식생산의 장려’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그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중국이 보살핌의 측면 역시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어느 하나만 작동해서는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즉 보살핌과 통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근래 중동의 시민혁명에서 볼 수 있듯 정보화가 정권 붕괴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보살핌의 측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통제의

명분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통제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의 권력은 단순히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호의는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통제와 감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가 호의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침투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될지 모른다. 예컨대 얼마 전 중국 검찰이 한 음주 운전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술집에 들어서는 장면을 시작으로 밀폐된 룸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동아일보 2011). 이 사례는 국가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지, 아니 감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골드파브(Goldfarb 2006)는 ‘작은 것들의 정치(The Politics of Small Things)’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이 ‘작은 것’을 편애하며, ‘작은 것’을 통한 사회변화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한다. 과거에는 식탁, 불법서점, 문예모임 등과 같은 ‘작은 것’이 제한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작은 것’이 더욱 원활하고 자유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은 분명 ‘작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작은 것’만 편애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은 ‘큰 것’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에는 ‘작은 것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다. 따라서 ‘작은 것들’의 의도를 알기 위해 국가는 가혹한 수사와 때론 필요하다면 고문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는 국가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고를 덜어준다. 즉 이제 국가는 앉아서 ‘작은 것’이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 울타리 내에서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그것의 목적이 보살핌이든 감시이든지 간에 ‘작은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침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나아가 ‘작은 것’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가능태적 모습을 중국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울타리 내에서 ‘작은 것’들을 감시한다. 물론 보살핌의 제공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중국은 울타리 내에서의 자율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울타리를 부수거나,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탄압한다.

중국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가진 함의는 다분히 중국 내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사회 안정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중국 당국의 정보화 시대 권력행사는 중국이 정보화 초기에 싱가포르의 경험을 적극 학습하였듯이(고경민 2008, 37)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방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는 중국에게는 그것이 ‘현실태’이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가능태’라는 점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매우 작은 차이이다.

[투 고 일 : 2012년01월03일]

[심사완료일 : 2012년06월01일]

[게재확정일 : 2012년07월22일]

참고문헌

- 고정민. 2007.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 가능한가?: 중국 인터넷 발전의 정치적 외부효과와 정부의 역할.” 『국제정치논총』47(2): 29-49.
- _____. 2008. “‘독재자의 딜레마’인가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인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 메커니즘.” 『국제지역연구』11(2): 31-56.
-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서울: 한울.
- 김성웅. 2009. “중국 <문화산업진흥규획> 발표” 『동향』21(23): 55-60.
- 김태심. 2011. “권위주의 국가의 선별적 정보통신기술도입: 중국과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수중. 2008. “중국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발전과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중국금융연구포럼』(6월 17일):
- 니콜라스 네크로폰테, 백옥인 옮김. 2003. 『디지털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동아일보 2011. “실체 드러난 中 사생활 감시.” <http://news.donga.com/Inter/3/02/20110518/37346427/1>(검색일 2011.05.18.).
- 미셸 푸코, 홍성민 옮김. 1991. 『권력과 지식』서울: 나남출판.
- 방화룡·권순동. 2008. “중국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10월 31일).
- 스티븐 룩스, 서규환 역. 1992. 『3차원적 권력론』서울: 나남.
- 류석진 허정수. 2010.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 연구 (2)』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봉규. 2002.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라.”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월 24일).
- _____. 2010. “중국과 한국의 개인 신용정보제도 비교와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시사점.” 『현대 중국연구』11(2): 89-122.
- 신영미. 2011. “중국내 반한정서의 현황과 동인: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34(4): 107-138.

- 심재원. 2008. “미셀 푸코와 자유주의: ‘통치성’과 ‘국가 유명론’.” 『철학』96: 83-107.
- 안소니 기든스, 진덕규 옮김. 1991. 『民族國家와 暴力』서울: 삼지원.
- 안유화. 2011. “중국 금융산업 발전전력과 전망.” 『2011년 국제금융센터 세미나』(6월 28일).
- 윤경우. 2010.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 실태.”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팀 전문가 간담회』. (10월 25일).
- 윤병수. 2010. “중국 외자은행의 경영환경 변화 진단(2): 2010년 중국 금융시장환경 및 제도 환경 변화와 영향.” 『하나 금융정보』115.
- 이문수. 2010.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Foucault가 보는 행정권력의 기원과 현재.” 『한국행정 논집』22(3): 939-958.
- 이민자. 2004. “중국 온라인 공간의 주도권 쟁탈전: 국가-사회의 경쟁.” 『한국과 국제정치』 20(4): 199-227.
- _____. 2008.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문제.” 『현대중국연구』11(1): 1-43.
- 이중희. 2008. “중국 네티즌의 추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국제지역연구』12(2): 267-294.
- 이진경. 2003. 『철학의 외부』서울: 그린비.
- 장윤미. 2011.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발전전략.” 『중소연구』34(4): 67-108.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0. 『중국 10차 5개년 계획 정보화 발전전략과 기획방향』. 서울: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은행. 2011. “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2011-50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중국, 인터넷 이용인구 최대 보유국가로 부상.” 『Issue Tagging』 2008-07호.
- _____. 2010.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_____. 2011a. “중국, 12.5 계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추진 현황.” 『IT 동향정보』 (3월 30일).
- _____. 2011b. “중국 SNS 시장, ‘트위터형’에서 ‘페이스북형’으로 진화.”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리포트』47.
- _____. 2011c. “중국 시나(Sina), SNS 시장 확대 본격화.” 『Trend Report』

(7월 5일).

허정수. 2010. “정보화시대 국가의 권력자원 변환에 대한 연구: 미국의 거시경제정보생산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中國國務院. 2009. “文化產業振興規劃” http://www.gov.cn/jrzg/2009-09/26/content_1427394.htm(검색일 2009. 12.28)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0.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http://cnnic.cn/upload/files/pdf/2010/1/15/101600.pdf>(검색일 2012.3.3.)

_____. 2011. 第27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http://research.cnnic.cn/img/h000/h12/attach201102211453210.pdf>(검색일 2011.12.22.)

_____. 2012. 第29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http://cnnic.cn/dtygg/dtgg/201201/W020120116337628870651.pdf>(검색일 2012.3.3.)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8. 商務部關於促進電子商務規範發展的意見(2007). <http://eb.mofcom.gov.cn/aarticle/ab/c/200809/20080905807160.html>(검색일 2012.3.3.)

Alavi, Maryam, and Leidner, Dorothy E. 2001. “Review: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Conceptual Foundations and Research Issue.” *MIS Quarterly* 25(1): 107-136.

Alexander, Marcus. 2005. “The Internet and Demoratization: The Development of Russian Internet Policy.”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12(4): 607-627.

Bachrach, Peter, and Baratz, Morton S. 1970.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arber, Benjamin. 1998.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Strong Demo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4): 573-589.

Carnoy, Martin, and Castells, Manuel. 2001.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 1(1): 1-18.

Choi, Byung Hun. 2011. “A study on Online IM(Instant Messenger) Development in

- China : Focusing on Network Effect for QQ Messenger Users.” 『동아연구』60: 117-153.
- Chung, Jongpil. 2008. “Comparing online activities in China and South Korea: The Internet and the Political Regime.” *Asian Survey* 48(5): 727-751.
- Dahl, Robert, A. 1957.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 2(3): 201-215.
- Foucault, Michel. trans by Hurlet, R.[and others]. 2000. “Governmentality.” James D. Faubion ed, *Power*. pp. 201-222, New York: New Press.
- _____. trans by Burchell,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algrave.
- Friedman, Thomas L.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Anchor Books.
- Galloway, Alexander, R.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Goldsmith, Jack, and Wu, Tim.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mpert, David C. 1999. “Right Makes Might: Freedom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Zalmay Khalilzad, John P. White, and Andrew W. Marshall eds, *Strategic Appraisal: The Changing Role of Information in Warfare*. pp. 45-73. Santa Monica, Calif: RAND.
- Hachigian, Nina. 2002. “The Internet and Power in One-Party East Asian State.” *The Washington Quarterly* 25(3): 41-58.
- Hart, Roderick, P. 1996. “Easy Citizenship: Television’s Curious Leg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1): 109-119.
- Huges, Thomas, P. 1987.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 Wiebe Bijker, Thomas P. Huges, and Trevor F.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pp. 51-82. Cambridge: MIT Press.
- Goldfarb, Jeffrey C. 2006. *The Politics of Small Thing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Kalathil, Shanthi, and Boas, Taylor C. 2003.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edzie, Christopher R.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Coincident Revolutions and the Emergent Dictator's Dilemma*, Santa Monica, CA: RAND.

Lash, Scott, and Urry, John. 1987. *End Of Organized Capital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aw, John, and Callon, Michel. 1992. "The Life and Death of an Aircraft: A Network Analysis of Technical Change," Wiebe E. Bijker and John Law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pp. 20-52. Cambridge: MIT Press.

Lessig, Lawrence. 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ew York: Basic Books.

Loo, Becky P. Y. 2004. "Telecommunications Reforms in China: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Telecommunications Policy* 28(9/10): 697-714.

Ma, Lianjie., Chung, Jongpil, and Stuart Thorson. 2005. "E-government in China: Bring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1): 20-37.

Mann, Michael. 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2).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golis, Michael and Resnick, David Resnick. 2000. *Politics As Usual*. London, New York: Sage.

Meyer, Michael., Michael, David c. and Nettesheim, Christoph. 2008. "China's Digital Generations: The 570-Million-Hours Opportunity." Boston Consulting Group.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I(OpenNet Initiative), Internet Filtering in China in 2004-2005(April 2005) <http://>

- www.opennetinitiative.net/studies/china/ONI_China_Country_Study.pdf(검색일 2011.12.29.)
- Pain, Julien. 2005. "Internet-Censor World Championship." Reporters without Borders, Handbook for Bloggers and Cyber-Dissidents(September 2005).
-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10. "New Media, Old Media: How Blogs and Social Media Agendas Relate and Differ from the Traditional Press."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http://www.journalism.org>(검색일 2010.07.23.).
- Poulantzas, Nicos. 1980.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NewLeftBooks.
- Rodrik, Dani. 1996.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537. <http://www.nber.org/papers/w5537>(검색일 2010. 1. 10).
- Ronfeldt, David. 1992. "Cyberocracy is 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8(4): 243-296.
- Rosenau, James. 2002.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Skills, Networks, and Structures That Sustain World Affairs." James Rosenau and J.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pp. 275-288.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range, Susan. 1988.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 _____.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ubman, Geoffry. 1998. "A Not-So World Wide Web: The Internet, China, and the Challenges to Nondemocratic Rule." *Political Communication* 15(2): 255-272.
-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 Weber, Max, trans by Fischhoff, E.[and others], 1968.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s. *Economy and Society* vol. 1. New York: Bedminster Press.

ABSTRACT

Chinese State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An Analysis on the Chinese Informatization Using the Concepts 'Pastoral Power' and 'Information Power'

Hur Jung Su

Not a few studies have already introduced to the cases of authoritarian states, such as China, trying to control the Inter-network(INTERNET)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studies in regard to China's case generally focused on how successful the government has been to make use of such kind of network as INTERNET as a measure of state power to 'control' over its market and civil society. And there have been two main points view, one of which claims the ever-growing influence of the Inter-network would eventually serve as leverage to restrain Chinese state power, the other claiming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little hesitation and a lot of measures to actively control over INTERNET users, wouldn't be stopped succeeding in making the optimal informatization to the extent it attains only the effect of INTERNET Economy but such political instability as coming up with the worldwide open network, easy for people to express and circulate their idea. As of now, the latter viewpoint seems more likely in view of the successful performance in regulating the INTERNET, just until now, of Chinese government, which never guarantees its future success to control over its market or civil society. This study, other than the advanced studies referred above, abstains from normative

perspectives on Chinese state-driven informatization or its intervention in the local INTERNET users, and does not intend to foresee Chinese future politics through information network including INTERNET. Rather, it pursues to analyze Chinese state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using the concepts 'Pastoral Power' and 'Information Power', thereby identifies the operation mode of Chinese state power(modus operandi) as the two-faced character, one of which is a 'guardian' and the other 'surveillant'. 'Information Power' is the concept to manifest the measures of Chinese government in the information age to exercise its power and control over the civil society. 'Pastoral Power' is the concept to argue what the purpose and properties of Chinese 'Information Power' are.

Key Words China, Information age, Informatization, Information power, Pastoral power, Modus operandi